

현안과 과제

■ 서민금융 지원 정책과 저소득층 가계부채

Executive Summary

< 요약 >

■ 개요

최근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며 가계부채가 가계의 처분가능소득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중소득, 고소득층 가구에 비해 저소득층 가구는 채무상환능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해 향후 이들 계층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리스크가 확대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지난 3년간 저소득층 가계부채의 주요 특징 변화를 통해 저소득층 가계부채 해결을 위한 정부 정책의 성과와 개선점을 알아보았다.

■ 서민금융 지원 정책 현황과 저소득층 가계부채

(서민금융 지원 정책 현황) 정부는 금융위기 이후 저소득층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소득 향상, 서민금융 확대, 신용회복 지원 등 3가지 측면에서 다양한 지원책을 실시하였다. 취업성공패키지 등을 통해 저소득층 취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저소득층 자영업자를 위해 자금 및 경영컨설팅 지원을 지속하고 있다. 또한 햇살론, 바뀐드림론, 새희망홀씨 등 서민금융 상품 확대를 통해 저금리 자금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있으며, 국민행복기금 등을 통해 채무불이행에 빠진 저소득층의 재기를 도와주고 있다. 이러한 지원 대책의 결과 **저소득층 취업을 상승, 저리 자금 공급 확대, 채무조정 확대 등 양적인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그리고 일부 질적인 부분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최근 서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다.

(저소득층 가계부채의 주요 특징) 첫째, 금융대출이 있는 저소득층 가구의 채무상환능력이 소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저소득층 가구의 원금 상환액이 꾸준히 증가한 점 등으로 인해 평균 금융부채가 2013년 4343만원에서 2014년 3764만원으로 감소했다. 부채 규모가 줄어들면서 저소득층의 채무상환능력은 소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난다. 가처분소득 대비 원리금상환액 비율이 2013년 65.7%에서 2014년 63.3%로 소폭 하락했으며, 가처분소득 대비 총부채비율 역시 2013년 613.1%에서 2014년 516.8%로 하락했다. 다만, 채무상환능력 지표의 수치 자체가 상대적으로 매우 높아 저소득층 가구의 채무상환능력은 여전히 취약한 모습이다. 둘째, 저소득층 가구의 평균 소득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취업성공패키지 등 저소득층 일자리 대책으로 상용근로자 비중이 증가하면서 저소득층 가구의 평균 근로소득이 2013년 666만원에서 2014년 720만원으로 증가했다. 다만 평균 사업소득은 2013년 308만원에서 2014년 256만원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난다. 셋째, 연체경험 가구의 수 및 비중이 크게 감소하였다. 저소득층 가구 중 연체경험이 있는 가구는 2013년 48.1만 가구(38.5%)에서 2014년 39.1만 가구(30.9%)로 감소했다. 더욱이 이들 연체 가구의 채무상환능력이 다소 개선된 점 역시 긍정적인 부분이다. 이는 저소득층 연체자의 신용회복을 지원해주는 국민행복기금의 성과

가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저소득층의 2금융권 대출이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층 가구의 평균 2금융권 대출 잔액은 2013년 1274만원에서 2014년 1272만원으로 소폭 감소했다. 다만 상대적으로 채무상환능력이 떨어지는 다중채무가구(2금융권을 포함 총대출이 2건 이상인 가구)가 2012년 27만 가구에서 2014년 39.6만 가구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전체 저소득층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증가하고 있다. **다섯째, 이자율 10% 이상의 고금리 가구 수 및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연평균 이자율이 10%가 넘는 고금리 가구 수는 2013년 20.7만 가구에서 2014년 23.0만 가구로 증가했다. 특히 이들 고금리 가구는 비고금리 가구에 비해 생계를 위한 대출 비중이 높은데다가 부채상환을 위한 대출 비중이 증가하고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섯째, 저소득층 가구의 생계형 대출이 지속되고 있다.** 저소득층 가구 중 미래 부채 증가를 예상하는 가구의 약 70% 이상이 생활비를 위한 대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저소득층 가구의 대부분이 원리금 상환으로 생계에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저소득층 가구의 약 69%는 생계부담으로 실제 가계지출을 줄이고 있는 실정이다.

< 저소득층 가구의 채무상환능력 지표 > < 연체 경험 가구수 및 평균 금융부채 >

(단위: 만원, %)

	2012	2013	2014
가처분소득(A)	911	855	945
총부채(B)	3,882	5,243	4,884
원리금(C)	448	562	598
원금	283	336	437
이자	165	225	161
부채비율(B/A)	426.4	613.1	516.8
DSR (C/A)	49.2	65.7	63.3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자체 추산.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자체 추산.

주 : ()는 연체가구 비중.

■ 시사점

향후 저소득층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첫째, 저소득층이 양질의 일자리를 얻어 자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일자리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저소득층 자영업자들에 대한 금융 지원 및 경영 컨설팅 강화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시켜줄 필요가 있다.** **셋째, 저소득층 부채 구조의 질적 개선을 위해 원금 상환 유도, 서민금융 제도 강화 등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넷째, 생계에 곤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가구들을 위해 생계비, 의료비 및 학자금 등 사회 안전망과 관련된 지원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1.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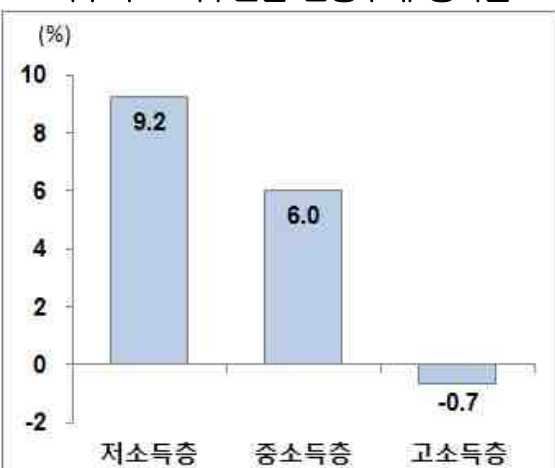
- 최근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며 가계부채가 처분가능소득보다 빠르게 증가해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중이 2014년 들어 큰 폭으로 상승
 - 2014년 가계의 처분가능소득은 789조원으로 전년대비 3.7% 증가한 반면 가계부채(가계신용 기준)는 1,089조원으로 전년대비 6.6% 증가
 - 이에 따라 2012년 133.0%에서 2013년 134.3%로 상승폭이 다소 둔화되었던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중이 2014년 들어 138.0%로 크게 상승
- 특히 지난 3년간 저소득층 가구의 부채가 상대적으로 빨리 증가하고 있어 향후 이들 계층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리스크가 확대될 우려
 - 가계부채의 증가는 민간소비 확대의 제약 요인으로 향후 경기회복의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으며, 특히 저소득층은 평균소비성향이 높아 가계부채에 따른 소비 축소가 상대적으로 더 크게 일어날 가능성이 높음
 - 최근 채무상환능력이 낮은 저소득층의 가계부채가 상대적으로 빨리 증가하고 있어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한 리스크 확대 우려 점증
- 따라서 저소득층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 정책을 살펴보고 지난 3년간 저소득층의 가계부채 특징 변화를 통해 정책 성과와 개선점을 도출

< 가계부채 및 처분가능소득 증가율 >



자료 : 한국은행.
주 : 가계신용 기준.

< 가구의 소득수준별 금융부채 증가율 >



자료 :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이용해 현대경제연구원 자체 추산.

- 주 : 1) 금융부채 보유가구 기준.
- 2) 2012~2014년 연평균 증가율.
- 3) 가구 분류 기준은 본문 7p 참조.

2. 서민금융 지원 정책 현황과 저소득층 가계부채

1) 서민금융 지원 정책 현황¹⁾

○ 정부는 금융위기 이후 저소득층의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소득 향상, 서민금융 확대, 신용회복 지원 측면에서 다양한 지원책을 실시

- (소득 향상 대책) 저소득층이 자체적으로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취업성공패키지, 미소금융 등의 지원 정책을 시행

- 저소득층이 기본적으로 소득 수준이 낮기 때문에 생계를 위해 빚을 지게 되고 빚에 대한 원리금 상환으로 다시 고통을 겪는 악순환이 반복
- 정부는 저소득층의 자활 능력을 높여주기 위해 취업성공패키지를 통해 저소득층 취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저소득 자영업자를 위해 미소금융 등을 통해 자금을 지원하는 동시에 경영컨설팅 지원도 지속

- (서민금융 확대) 제도권 금융에서 소외되는 저소득층을 위한 다양한 서민금융 상품을 통해 서민계층에 대한 금융 지원을 강화

- 저소득, 저신용의 서민계층은 은행보다는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 상호금융, 대부업체 등 2금융권 대출을 이용
- 바뀐드림론, 햇살론 등의 저금리 전환 상품을 통해 저소득층의 고금리 채무 부담을 완화해주고 있으며, 새희망홀씨를 통해 저소득, 저신용자의 제도권 은행 접근성을 제고

- (신용회복 지원) 채무불이행에 빠진 저소득층이 재기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국민행복기금 등을 통해 신용회복 대책을 강화

- 경기가 부진할 경우 저소득층은 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하기 쉬운 반면 이를 극복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
- 따라서 신용회복 의지가 있는 저소득 채무자의 과도한 부담을 덜어주고 성공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주기 위해 국민행복기금 등의 신용회복 대책을 강화

1) 서민은 통상 복지 측면에서는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소득 측면에서는 5분위 중 1~2분위 계층, 신용등급 측면에서는 10등급 중 6등급 이하를 의미. 서민금융진흥원이 지원하는 서민은 기본적으로 '제도금융권 이용이 곤란한 분'을 지칭.(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14.07.16.)

○ 정부의 지원 정책은 소득향상, 서민금융, 신용회복 등 측면에서 다양한 성과를 거두었으며 일부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

- 정부의 서민금융 지원 정책은 저소득층 취업률 상승, 저금리 자금 공급 확대, 저소득층 채무조정 확대 등 다양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

- 저소득 취업애로계층을 대상으로 한 취업성공패키지 결과 저소득층 사업참여자의 취업률이 2014년 76.4%에 달함
- 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 바퀴드림론 등 다양한 서민금융 상품을 통해 2008년 이후 약 20.2조원의 저금리 자금을 공급
- 국민행복기금 등 저소득층 채무조정 대책을 통해 지난 2013~2014년 약 34.1만 명의 신용회복을 지원

- 그러나 질적인 부분에서의 다소 개선되어야할 부분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이를 위해 정부는 개선책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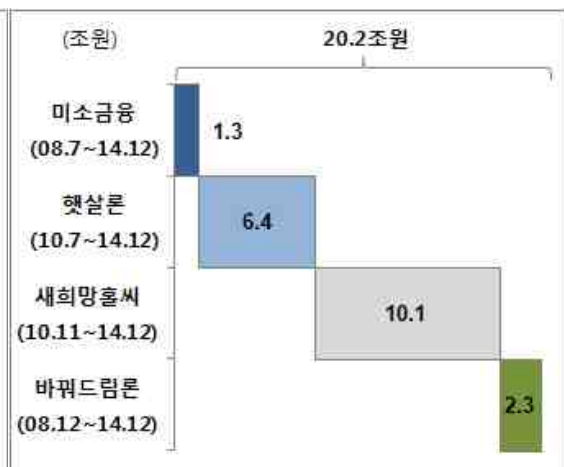
- 정부는 그 동안의 다양한 지원책에도 불구하고 서민금융에 대한 접근성 제고 부족, 질적 자활능력 제고 필요성, 유사한 중복 상품으로 인한 수요자 혼란, 다소 엄격한 채무조정 제도 등 개선점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²⁾
- 이에 정부는 최근 주거, 고용, 복지 지원과 연계한 서민금융 상품 도입 등 서민 취약계층 금융지원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

< 취업성공패키지 중 저소득층 참여자 및 취업률 >



자료 : 고용노동부(2015.03.)

< 서민금융 지원 규모 >



자료 : 금융위원회(2015.02.04).
주 : 대출실적 누적 기준.

2) 금융위원회, 2014.07.16., “서민금융 지원체계 개편방안 확정, 추진”.

2) 저소득층 가계부채의 주요 특징 변화

○ 분석 대상 및 방법

- 분석 대상인 저소득층 가구는 가구원수를 고려한 가처분소득이 중위소득의 50% 미만인 경우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이 있는 가구
 - 저소득층 가구는 OECD 및 통계청 기준과 동일한 균등화 가처분소득 (가처분소득/√가구원수)이 중위소득의 50% 미만인 가구를 의미³⁾
 - 단, 모든 저소득층 가구가 아니라 금융기관으로부터 담보대출, 신용대출 또는 신용카드대출이 존재하는 가구만을 분석 대상으로 함⁴⁾
- 소득향상, 서민금융 확대, 신용회복 지원 등 정부 정책 효과에 맞추어 금융대출이 있는 저소득층 가구의 주요 특성을 분석⁵⁾
 - 금융대출이 있는 저소득층 가구의 소득, 이자부담 및 2금융권 대출, 대출 용도, 연체 가구 등에 대해 분석
 - 또한 저소득층 가구의 채무상환능력을 알아보기 위해 원리금 상환액/가처분소득, 총부채/가처분소득 등의 지표를 이용
- 분석 대상인 금융대출이 있는 저소득층 가구는 2014년 126.3만 가구로 추계
 - 통계청 2012~2014년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이용해 저소득층 가구를 추계한 결과 저소득층 가구는 2014년 443만 가구로 추계
 - 이 중 분석 대상이 되는 금융대출이 있는 가구는 2014년 기준 126.3만 가구로 추계되며, 전체 저소득층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28.5%로 나타남

< 저소득층 가구 현황 >

(단위: 만가구, %)

	2012년	2013년	2014년
저소득층 가구	413.2 (100)	426.4 (100)	443.0 (100)
금융대출 있는 가구	105.6 (25.6)	124.8 (29.3)	126.3 (28.5)
금융대출 없는 가구	307.6 (74.4)	301.6 (70.7)	316.7 (71.5)

자료 :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이용해 현대경제연구원 자체 추산.

주 : ()는 전체 저소득층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

- 3) 중소득 가구는 균등화 가처분소득이 중위소득의 50% 이상 150% 미만, 고소득 가구는 150% 이상인 가구.
- 4) 직장, 개인, 각종 공제회 대출 및 외상 및 할부미상환액, 갯잔후 불입금액 등은 제외.
- 5) 가구 기준 분석임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 가구의 가계부채 특징 변화를 통해 정책 효과의 흐름은 파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 한편 저소득층 가구에 대한 분석이 2014년 3~4월 실시된 2014년 가계금융복지 조사를 이용했기 때문에 이후 실시된 정책의 효과는 정확하게 반영되기 어려운 점도 한계.

○ 채무상환능력 소폭 개선

- 금융대출이 있는 저소득층 가구의 원금상환액 증가로 평균 부채가 다소 감소
 - 저소득층 가구의 원리금 상환액은 2012년 평균 448만원에서 2014년 평균 598만원으로 증가하였으며, 특히 원금 상환액이 2012년 평균 283만원에서 2014년 평균 437만원으로 증가
 - 원금 상환액의 증가 등으로 2012년 3155만원에서 2014년 4343만원으로 증가했던 평균 금융부채액은 2014년 들어 3764만원으로 감소
- 부채 규모가 줄어들면서 저소득층의 채무상환능력은 2014년 들어 소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
 - 저소득층의 가처분소득 대비 원리금상환액 비율은 2012년 49.2%에서 2013년 65.7%로 크게 증가했다가 2014년 63.3%로 소폭 감소
 - 가처분소득 대비 총부채 비율은 2012년 426.4%에서 2013년 613.1%로 증가했다가 2014년 516.8%로 크게 감소
- 저소득층 가구의 부채 조정으로 채무상환능력이 소폭 개선되었지만 아직까지는 여전히 상대적으로 매우 취약한 모습⁶⁾

< 저소득층 가구의 소득 및 부채 >

(단위: 만원)

	2012	2013	2014
경상소득	1,203	1,250	1,283
가처분소득	911	855	945
총부채	3,882	5,243	4,884
금융부채	3,155	4,343	3,764
원리금	448	562	598
원금	283	336	437
이자	165	225	161

자료 :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이용해 현 대경제연구원 자체 추산.
주 : 가구 평균.

< 저소득층 가구의 채무상환능력 지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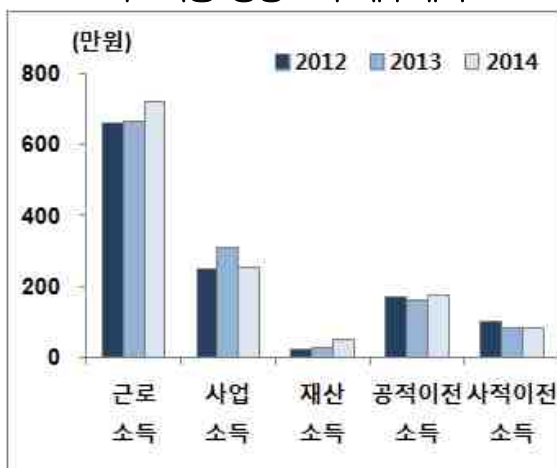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이용해 현 대경제연구원 자체 추산.
주 : DSR은 가처분소득 대비 원리금상환액, 부채비율은 가처분소득 대비 총부채를 의미.

6) 2014년 기준 중소득층 가구의 가처분소득 대비 원리금상환액 비율은 34.4%, 고소득층 가구는 28.5%이며, 가처분소득 대비 총부채 비율은 중소득층 가구가 235.7%, 고소득층 가구는 225.2%로 나타남.

○ 저소득층 평균 소득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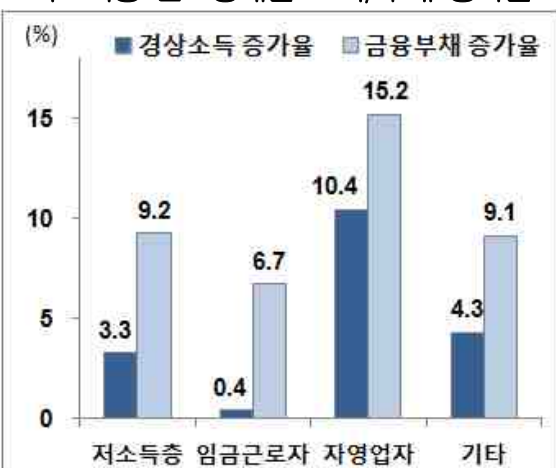
- 금융대출이 있는 저소득층 가구의 평균 근로소득은 증가했지만 평균 사업소득이 감소하며 전체 평균 경상소득은 소폭 증가
 - 저소득층의 근로소득은 2013년 666만원에서 2014년 720만원으로 다소 큰 폭으로 증가한 반면 사업소득은 2013년 308만원에서 2014년 256만원으로 감소
 - 저소득층의 경상소득은 2013년 1250만원, 2014년 1283만원으로 소폭 증가
- 다만 저소득층 가구는 평균 경상소득 증가에도 불구하고 평균 금융부채가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
 - 저소득층 가구 중 가구주가 임금근로자인 가구가 자영업자나 기타 무직 등의 가구보다 소득 증가율과 부채 증가율의 차이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 더욱이 저소득층 가구의 경우 상용근로자 비중이 2012년 17.5%에서 2014년 20.0%로 증가했지만 여전히 임시/일용 근로자 비중이 2014년 27.3%, 무직이 29.9%로 나타나는 등 일자리의 질적인 개선도 다소 부진한 상황
- 정부의 저소득층 일자리 대책으로 저소득층의 평균 소득이 증가했지만 소득보다 부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점에 대한 주의가 필요

< 저소득층 경상소득 세부내역 >



자료 :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이용해 현대경제연구원 자체 추산.

<저소득층 근로형태별 소득/부채 증가율>



자료 :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이용해 현대경제연구원 자체 추산.

주 : 1) 가구주 근로형태 기준.
2) 2012~2014년 연평균 증가율.

○ 연체 가구 감소

- 저소득층 중 연체 경험이 있는 가구의 수는 감소하고 있으며 이들 가구의 평균 부채 잔액도 크게 감소
 - 저소득층 중 2013년 48.1만 가구가 원리금 상환에 연체를 경험한 적이 있지만 2014년에는 39.1만 가구로 크게 감소
 - 특히 연체 경험이 있는 가구의 평균 금융부채 잔액이 2013년 5828만원에서 2014년 4334만원으로 감소
- 연체 경험 가구의 채무상환능력은 상대적으로 매우 취약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으나 부채 및 원리금 감소 등으로 다소 개선된 모습
 - 연체 경험 가구의 가처분소득은 증가했으나 총부채가 감소해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 비율도 2013년 859.0%에서 2014년 527.6%로 하락했으며,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액 비율 역시 2013년 81.3%에서 2014년 69.0% 하락
 - 원리금 상환액은 2013년에 비해 소폭 감소했으나 특히 이자는 줄어든 반면 원금 상환액이 크게 증가한 점이 긍정적인 요인
- 이는 6개월 이상 연체자를 대상으로 신용회복을 지원해주는 국민행복기금의 성과가 나타난 것으로 판단함

< 연체 경험 가구수 및 평균 금융부채 > < 연체 경험 가구의 채무상환능력 지표 >



	2012	2013	2014
가처분소득(A)	965	788	915
총부채(B)	4,353	6,767	4,825
원리금(C)	529	641	631
원금	333	323	471
이자	195	318	160
부채비율(B/A)	451.1	859.0	527.6
DSR (C/A)	54.8	81.3	69.0

자료 :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이용해 현 대경제연구원 자체 추산. 자료 :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이용해 현 대경제연구원 자체 추산.
 주 : ()는 연체가구가 전체 저소득층 가구 주 : 가계지출을 줄인 가구의 지출감소 항목별 비중.
 에서 차지하는 비중.

7) 2013년 22.8만명, 2014년 11.3만명 등 총 34.1만명이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채무조정을 지원받음.

○ 2금융권 부채 소폭 감소⁸⁾

- 저소득층의 평균 2금융권 부채 잔액은 증가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소폭 감소
 - 저소득층 2금융권 부채는 2013년 1274만원에서 2014년 1272만원, 1금융권 부채는 2013년 2795만원에서 2014년 2325만원으로 감소
 - 이에 따라 총금융기관 부채 잔액 중 2금융권 부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3년 31.3%에서 2014년 35.4%로 증가

- 다만 2금융권 대출이 있는 다중채무 가구수 및 전체 저소득층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
 - 저소득층 중 다중채무 가구는 2012년 27만 가구에서 2013년 35.5만 가구, 2014년 39.6만 가구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전체 저소득층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2년 25.6%에서 2013년 28.5%, 2014년 31.4%로 증가
 - 다중채무 가구는 소득 대비 원리금상환액 비율이 2014년 114.6%, 소득 대비 부채비율은 105.1%로 나타나는 등 채무상환능력이 매우 취약한 상황

- 서민금융 확대로 저소득층의 2금융권 대출은 증가하지 않았지만 다중채무 가구가 늘어나고 있는 점은 향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

< 저소득층 2금융권 대출 잔액 및 비중 >



< 다중채무 가구수 추이 >



자료 :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이용해 현재 대경제연구원 자체 추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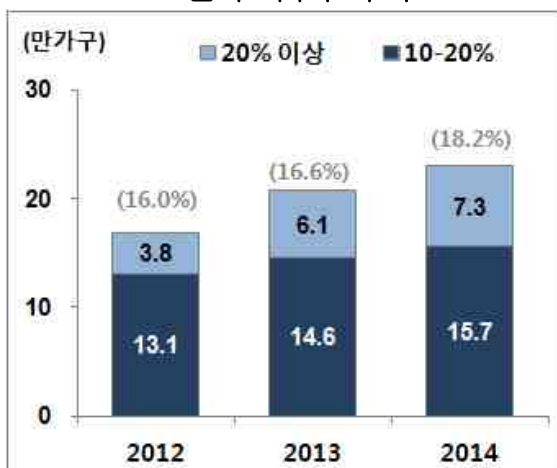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이용해 현재 대경제연구원 자체 추산.

8) 다중채무 가구는 2금융권 대출 포함 총 대출 건수가 2건 이상인 가구(은행권 대출만 2건 이상인 가구는 제외)이며, 2금융권 부채는 저축은행, 비은행금융기관, 보험 및 증권회사, 대부업체, 여신전문기관 부채를 의미.

○ 고금리 가구 증가⁹⁾

- 금융대출이 있는 저소득층 가구 중 이자율이 10%가 넘는 고금리 가구 증가
 - 연간 이자 상환액이 총금융부채의 10~20%인 가구수는 2012년 13.1만, 2013년 14.6만, 2014년 15.7만 가구로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20% 이상인 가구 역시 2012년 3.8만, 2013년 6.1만, 2014년 7.3만 가구로 증가
 - 저소득층 가구수는 2년간 연평균 9.4%로 증가한 반면 고금리 가구는 16.6%로 증가. 특히 20% 이상 가구는 38.4%로 더욱 빠르게 증가
- 특히 이러한 고금리 가구의 경우 전체 부채에서 부채상환과 생활비 마련을 위한 대출 비중이 2014년 들어 증가해 부채의 악순환에 빠질 우려가 높음
 - 연가 이자율이 10%가 넘는 고금리 가구의 경우 비고금리 가구에 비해 부채상환 및 생활비 마련을 위한 대출 비중이 높으며, 비중 자체도 증가
 - 이들 가구의 소득 수준은 저소득층 전체 평균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고금리 대출에 대한 원리금 상환 부담으로 부채의 악순환에 빠질 우려
- 바뀐드림론 등 저금리 자금 지원에도 불구하고 부채 조정을 하지 못하는 가구나 정책 지원에서 소외받는 가구가 증가하고 있을 가능성도 존재

< 고금리 가구수 추이 >



< 고금리 가구의 용도별 부채 잔액 >

	고금리 (%)		비고금리 (%)	
	2013	2014	2013	2014
부채상환	7.6	10.1	4.1	3.5
생활비	45.8	45.8	9.0	8.8
사업자금	18.5	19.8	27.9	25.6
부동산	25.5	12.0	55.2	58.1
기타	2.6	12.3	3.8	3.9

자료 :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이용해 현재 대경제연구원 자체 추산.

주 : ()는 10% 이상인 고금리 가구가 전체 저소득층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료 :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이용해 현재 대경제연구원 자체 추산.

주 : 생활비는 교육비 및 의료비 포함.

9) 고금리 가구는 연간 이자상환액 대비 금융대출 잔액으로 산출한 이자율이 10% 이상인 가구를 의미. (금융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15~20%대가 중금리, 20% 이상이 고금리로 분류되나, 본 보고서에서는 햇살론, 새희망홀씨, 바뀐드림론 등 서민금융 상품 금리가 10% 전후인 점을 고려하여 10% 이상 금리를 고금리로 분류.)

○ 생계형 대출 증가

- 저소득층 중 미래 부채 증가를 예상하는 가구 중 약 70% 이상이 생활비를 위한 부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
 - 1년 후 부채규모 증가 예상 가구의 경우 생활비 마련을 위해 대출 증가 예상 가구가 2013년 72.6%, 2014년 71.6%로 70% 이상 지속
 - 실제 용도별 대출 잔액 비중을 보면 2014년 저소득층의 총 금융부채 중 약 20%가 생활비 마련을 위한 부채로 나타남

- 저소득층 대부분은 원리금상환액으로 인해 생계에 부담을 겪고 있으며, 약 70%가 가계지출을 줄이고 있음
 - 저소득층 가구 중 약 88.4%는 원리금상환액이 생계에 부담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약 69%의 가구는 생계부담으로 인해 가계지출을 줄이고 있음¹⁰⁾
 - 특히 저축을 감소시킨 가구 비중이 2012년 10.8%에서 2014년 15.0%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향후 저소득층의 채무상환능력 감소가 우려

- 지속적인 생활 안정 자금 지원 및 일자리 대책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소득의 절대적인 수준이 부족하다 보니 생계형 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

< 미래 부채증가 요인 >

< 가계지출 감소 항목별 비중 >

(%)				(%)			
	2012	2013	2014		2012	2013	2014
부동산 마련	5.8	8.6	14.0	저축 및 투자	10.8	13.7	15.0
부채상환	22.9	10.8	9.1	레저,여가,문화	14.1	16.6	17.0
사업자금	7.9	4.5	2.3	식품, 외식비	56.9	53.2	54.1
생활비	62.6	72.6	71.6	의류구입비	8.2	8.7	7.9
기타	0.8	3.5	2.9	교육비	6.3	5.3	3.8
				교통, 통신비	1.1	1.4	1.1
				기타	2.6	1.0	1.1

자료 :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이용해 현 대경제연구원 자체 추산.

주 : 1) 1년후 부채규모 증가가 예상되는 가구의 부채증가 요인별 비중.
2) 생활비는 교육비 및 의료비 포함.

자료 :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이용해 현 대경제연구원 자체 추산.

주 : 가계지출을 줄인 가구의 지출감소 항목별 비중.

10) 생계부담 가구 비중은 2012년 89.0%, 2013년 88.4%, 2014년 88.4%로 거의 변화가 없으며, 생계부담으로 지출을 줄인 가구 비중은 2012년 76.0%, 2013년 72.3%, 2014년 68.9%로 소폭 감소.

3. 시사점

- 정부의 지속적인 서민금융 지원 정책에 힘입어 저소득층 가구의 채무상환능력이 다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고금리 가구 및 생계형 대출 증가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현재 추진 중인 소득 향상 대책 및 서민금융 확대 등이 더욱 강화되어야 할 필요

첫째, 저소득층이 양질의 일자리를 얻어 자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일자리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

- 현재 추진 중인 고용 연계 대출, 자산형성 대출 등 저소득층의 자활 기반 마련을 위한 금융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필요
- 현재 생계 곤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나 궁극적으로는 저소득층이 스스로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지원이 필요
- 중장기적으로 취업성공패키지 등 일자리 대책 강화를 통해 저소득층이 스스로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저소득층의 근로 소득 증가가 일시적 현상에 그치지 않도록 현재의 취업 대책이 지속적으로 강화될 필요

둘째, 저소득층 자영업자들에 대한 금융 지원 및 경영컨설팅 강화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시켜줄 필요가 있다.

- 현재 운영 자금 융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자영업자들에 대한 자금 지원과 더불어 이들의 사업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경영컨설팅을 강화시킬 필요
- 저소득 자영업자는 저소득층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부채가 크기 때문에 경기 불황 등으로 사업이 어려울 경우 채무불이행에 빠질 위험이 더 높음
- 따라서 저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운영 자금 지원을 지속하는 한편 경영컨설팅 강화를 통해 이들의 자생력을 키워줄 필요

셋째, 저소득층 부채 구조의 질적 개선을 위해 원금 상환 유도, 서민금융 제도 강화 등의 노력이 지속되어야 한다.

- 저소득층의 경우 중고소득층에 비해 부채 규모 자체가 작기 때문에 원금 상환이 이루어질 경우 채무상환능력이 빠르게 개선될 여지가 높음
 - 따라서 안심전환대출과 같이 저소득층의 원금 상환을 유도할 수 있는 대출 상품을 통해 저소득층 부채의 질을 개선할 필요
- 또한 현재 추진 중인 고용 및 복지 연계 지원 제도를 통해 저소득층의 채무상환능력을 높여나가야 함
 - 이러한 저소득층이 서민금융 상품을 홍보 부족 등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 대책에 대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서민금융 상품 이용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함¹¹⁾

넷째, 생계에 곤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가구들을 위해 생계비, 의료비 및 학자금 등 사회 안전망과 관련된 지원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필요

- 대다수의 저소득층 가구가 생활비 마련을 위해 대출을 받고 있는 만큼 이들의 생계비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다양한 대책이 필요
 - 특히 단순히 생계비를 대출 확대가 아니라 의료비 및 교육비 지원 등을 통해 생활비 부담을 줄여줄 필요가 있으며,
 - 노인가구, 한부모 가구, 여성가구 등 특히 취약한 저소득 가구에 대한 공적 이전 소득 확대를 통해 소득 자체를 높여주는 방안도 검토해볼 필요

경제연구본부 조규림 선임연구원 (2072-6240, jogyurim@hri.co.kr)
이준협 연구위원 (2072-6219, sododuk1@hri.co.kr)

11) 서울시복지재단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중 91.1%가 서민금융 상품을 이용해본 경험이 없으며, 이 중 25.9%가 서민금융상품의 존재 자체를 모르며, 25.8%는 자격 요건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남.